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2018년도 나라 안팎으로
다사나단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 초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열망을 담은
개헌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에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극도의 긴장관계에 있던 남북관계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불씨를
소생시켰고 이를 토대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등 동반성장과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특집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국토는 현재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 국토의 11 퍼센트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 절반이 살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의 80 퍼센트, 신규 고용의 65퍼센트,
1000대 기업의 본사 74 퍼센트가 수도권에
밀집하여 있습니다. 인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표들이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불균형을 넘어 지방의 소멸이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국정과제와 4대 혁신·복합과제로 구체화되어 있는데, 이를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불균형은 모든 국민의 삶 또한 고단하게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비싼 집값 때문에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부족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목표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국정전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국정과제와 4대 혁신·복합과제로 구체화되어 있는데, 이를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러한 정부정책과 법제수요에 대응하고자 2018년 기본연구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의 부합성과 제도운영의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국가정책은 입법적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어 국가 주요 정책 현안을 법제화하는 데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많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발전해 가는 국책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한국법제연구원이 질적·양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는 국내 최고의 법제연구기관으로서, 또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